

세계화시대의 국민정체성 비교연구

김 병 조*

I. 머리말	IV. 주변국 국민정체성 분석
II. 자료 및 변수	V. 맺음말
III. 문명권 경제발전수준과 국민정체성	

I. 머리말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진정한 세계화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양속관계가 존재하지만, 지구상에서 금단의 땅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물질 교류는 인적 교류를 크게 앞서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세계 공용식품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자기 집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문화를 실시간에 접할 수 있게되었다. 전 세계에 걸쳐 인적, 물질,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가 점차 단일화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탈냉전 세계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 고심하게 되었다.¹⁾ 그리하

* 국방대학교, 사회학

1) 한편, 기든스는 개인들이 갖는 자아정체성을 현대성(modernity)으로 설명하면서 후기 현대(late modern age)에 나타나는 성찰적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Anthony Giddens, 『현대성과 자아

여 탈냉전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념, 정치, 경제가 아니라 문화이며, 이 새로운 세계에서 지역정치는 민족성의 정치학이며 세계정치는 문명의 정치학이 되고 있다는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가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²⁾

과연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이때 민족갈등이 더 첨예하게 드러나고, 민족주의가 다시금 분출하고 있다.³⁾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들이 양산되었으며, 발칸반도와 아프리카에서는 폭력을 수반한 민족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없는 민족들(nations without a state)이 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를 창설하려고 하며, 민족없는 국가들(states without a nation)은 힘겨운 민족건설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⁴⁾ 심지어 지구상에 교류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안정적인 사회로 간주되고 있는 유럽국가에서는 통합이 추진되면서도, 한편에서는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집단이 정치세력을 더하고 있으며, 외국인 차별 및 혐오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시대에 발생하고 여러 갈등을 해결하는 마땅한 주체가 형성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몇 세기 동안 정치, 국제정세를 주름잡던 민족국가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단위가 아닌 것 같다는 평가가 있다. 케네디(Paul Kennedy)에 따르면 세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국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어떤 문제의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⁵⁾

그렇지만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단위로서 국가를 대체할 마땅한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국가의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지만 케네디 역시 국가가 여전히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을 시도하기 위한 주요기관임을 인정하고 있다. 비슷한 견지에서 헌팅턴도 국가의 주권, 기능, 힘이 약화되는 추세이지만, 세계문제에서 여전히 국가가 일차적 주역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화, 문명이 중요한 세계라 할지라도 국민국가가 세계 정치에서 중추적 역할을 맞고 있으

정체성』(권기돈 역)(서울 새물결 1997).

2) Samuel Huntington, 『문명의 충돌』(이희재 역)(서울 김영사 1997), 20 ~21 쪽

3) Anthony D. Smith,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이재석 역)(서울: 남지, 1997), 13쪽.

4) Montserrat Geuibernau, *Nationalisms: the Nation-State and Nation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Polity Press, 1996).

5) Paul Kennedy, 『21세기 준비』(변도은·이일수 역)(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163 ~179 쪽

며, 국민국가는 권력과 부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선호, 동질성, 이질성 따위를 규정하기도 한다.⁶⁾

세계화시대에 국가, 민족의 장래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결말을 맺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느냐 하는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정도가 국가, 민족, 문명 등의 개념이 갖는 분석적 유용성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잔(Barry Buzan) 등⁷⁾에 따르면 국가가 하나의 단위로서 기능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주요 개념이 바로 정체성이기 때문이다.⁸⁾

이 글은 국민정체성을 ‘국민들이 자신의 운명 내지 이해관계를 국가의 운명 및 이해관계와 동일시하는 정도’로 개념규정하고, 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비교를 시도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전반부에서는 32개국을 대상으로 국민소득수준별로 국가별 국민정체성을 비교함으로써,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각 나라의 가치관이 수렴할 것인가 하는 발전론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국민정체성을 비교하되, 성별, 연령별 등 하위집단별 국민정체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국가간 국민정체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작업은 부분적으로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가설’ 및 잉글하트의 ‘문명지도 가설’⁹⁾에 대한 검증작업이기도 하다.¹⁰⁾

6) Samuel Huntington, *op.cit.*, p. 20, 37. 헌팅턴이 국민국가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현실성, 경제성, 예측성에 비추어 볼때, 국제정치의 새로운 분석단위로 문명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Barry Buzan, Ole Woeb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 1998), pp. 119 ~140.

8) 켈킨스는 정체성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으며, “사회정체성이 없으면 사회가 없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Richard Jenkins, *Social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p. 6.

9) Ronald Inglehart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2000); Ronald Inglehart, 「문화와 민주주의」, Samuel Huntington and Lawrence Harrison(eds.), 『문화가 중요하다』(이종인 역)(서울: 김영사, 2001).

10) 잉글하트의 문명지도는 헌팅턴의 문명권분석과 상당 정도 일치한다. 그렇지만 잉글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헌팅턴의 가설과 달리 프로테스탄트 사회와 가톨릭 사회가 뚜렷이 다른 가치관을 갖

II. 자료 및 변수

1. 자료

분석에 사용된 주 자료는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수집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s) 원자료이다¹¹⁾ 이 조사는 그동안 1981-1982년, 1990-1991년, 1995-1998년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995-1998년에는 50 개국이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표본의 수가 크고(800명 이상), 아시아, 서구, 동구, 중남미에 속한 32개 국가에 한정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32개 국가 중 21개 국가는 1996년도에 조사되었으며(한국, 필리핀, 인도, 터키,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멕시코,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7개 국가는 1995년도에 조사되었고(일본, 중국, 대만,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1997년에는 4개국이 조사되었다(독일¹²⁾, 폴란드, 아르메니아, 브라질).

또한 분석을 할 때는 조사대상자 가운데 응답자 연령이 20세 이상 69세인 자료 한정했다. 연령의 하한선을 설정한 것은 개인마다 국민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성인이 되어야 비교적 안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인에 대한 사회조사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의견이 여론으로 투영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았기 때문에 70세 이상을 제외했다

국민정체성의 특성상 조사시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정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헌팅턴이 전통적인 문명권만을 주요 변수로 분석한 것과 달리, 잉글하트는 ‘공산주의’를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위의 논문 155~161쪽). 여기서, 헌팅턴의 논의가 지나치게 문명권을 단순화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은 잉글하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잉글하트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유사한 유교사회로 간주하는데, 한국인으로서 한중일 동양삼국간에 존재하는 국민정체성의 차이를 서구인의 관점에서 간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 11)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서울대학교 한상진 교수님과 정신문화연구원 은기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자료는 잉글하트의 주도 아래 수집되었으며, 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미시간대학의 웹사이트 <http://wvs.isr.umich.edu>를 참조.
- 12) 독일은 서독과 동독이 구분되어 조사되었으나, 여기서는 서독에 한정했다

체성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정상적인 생활조건 아래에서는 의식하지 못한 채 잠재되어 있다가도, 국가가 위기에 빠지거나,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 아니면 외국인 및 외국문물과의 접촉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표면화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건, 사고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일상적인 국민정체성을 알아보는 데 적합하다. 그런 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1995년에서 1997년은 특히 1990년을 전후해 이루어진 냉전체제의 와해와 비교했을 경우 국제정치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기간이어서 적절한 조사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¹³⁾

다만,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국제경제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가일층 자유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반작용으로 경제적 민족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은 미리 예기된 것이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정체성에는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변동은 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이다. 1996-1997년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시달리면서 국가부도위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말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앞에 분석된 32개국의 면면을 보면 당시 외환위기가 심각하던 국가는 없을 뿐더러, 한국의 경우 1996년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국민정체성에 미친 특별한 요인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변수

이 글의 종속변수는 국민정체성이다. 현재 세계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마다 세계화의 각 차원이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민정체성도 단일 차원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치 군사적 측면 등의 여러 면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음 각각의 질문이 국민정체성의 각 측면을 측정한다고 보았다.¹⁴⁾

13) 결프전을 포함해 중동지역의 불안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14) 찬성과 반대를 양극으로 하고,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중간 정도 의견이라고 간주했다. 무응답을 중간 정도 의견으로 본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자료를 분석해 보니, 국가에 따라 ‘모르겠다’가 있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었다. 그런데, ‘모르겠다’가 항목에

a. 경제적 측면의 국민정체성(국내산업보호):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면 경제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이 높은 것이고, 외국상품수입에 관용적이면 경제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이 낮다.

b. 사회적 측면의 국민정체성(국민우선고용):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면 사회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이 높은 것이고, 반대하면 사회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이 낮다.

c. 정치/군사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전쟁참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를 위해 기꺼이 싸우겠다고 정치/군사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이 높은 것이고, 아니라고 대답하면 정치/군사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이 낮다.

한편, 기본적인 독립변수는 국가이다.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 나라의 국민들이 갖게 되는 국민정체성이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¹⁵⁾ 그리고 국가가 처한 상황은 다시 경제발전수준 내지 국민소득수준, 문명권 내지 문화적 특성, 사회주의체제의 경험 여부, 국민구성의 다양성 여부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가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배경변수가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라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정체성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정체성 역시 ‘과정’을 통해 획득하게 된다.¹⁶⁾ 구체적으로는 생의 과정 속에서 개인 수준에서 국민들 내부의 같음(similarity)과 다른 국민과의 다름(difference)을 인식함으로써 국민정체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국민정체성은 국가가 처한 상황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국민 내부에 국민정체성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개개인의 편차를 규정하는 독립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계층, 주관적 계층의식을 선정했다.¹⁷⁾

있는 경우는 무응답이 없거나 극히 소수였다. 반대로 ‘모르겠다’가 없는 경우는 상당수의 무응답이 존재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응답’을 ‘모르겠다’와 같이 취급했다.

15) 사회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의 국민정체성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 개별 국민이 갖는 국민정체성의 합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분석적으로 국가수준과 개인수준을 구분하고자 한다

16) Richard Jenkins, *op.cit.*, p. 6.

17) 독립변수 조작화 방식은 국민을 하위집단으로 구분해 분석할 때 언급하고자 한다.

III. 문명권, 경제발전수준과 국민정체성

<표 1>은 32개국을 문명권별로 구분하고 국민정체성의 하위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내산업보호에 찬성하는 비율, 국민우선고용에 찬성하는 비율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내산업보호 63.3%, 국민우선고용 75.0%, 전쟁참여 75.2% 로, 경제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회적 측면의 국민정체성과 정치/군사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은 비슷하다. 그러나 표준편차를 볼 때, 사회적 측면이 정치/군사적 측면보다 국가별 편차가 다소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각각 측면에 대한 점수분포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내산업보호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남미 국가들이 찬성비율이 높은 반면, 서구와 동구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고, 아시아 국가의 경우 매우 낮은 찬성비율을 보이는 국가(일본)에서 높은 찬성비율을 보이는 국가(터키)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국민우선고용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아시아와 남미에서 찬성 의견이 매우 높은 반면, 서구는 비교적 낮고, 동구는 국민우선고용을 크게 찬성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혼합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참여의사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이 발발하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반면, 다른 지역은 다시 소지역으로 구분된다. 서구에서 북구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동구에서 아제르바이잔, 남미에서는 페루 등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높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국민정체성의 특성을 몇 가지 추출할 수 있다. 첫째, 국민정체성을 정치/군사, 사회, 경제 등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측면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점이다. 즉, 국가 및 지역별로 국민정체성의 세 측면이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이는 국가도 있고(터키, 페루, 베네수엘라 등), 세 측면 모두 낮은 국가도 있지만(독일, 라트비아 등), 전체적으로 보면 각각의 측면에 따라 국민정체성이 달라지고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정체성은 문명권적 특성을 반영한다. 그리스정교 중심의 동구, 프로테스탄트 중심의 서구 및 가톨릭 중심의 남미가 내부적으로 비교적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의 경우 세 측면 모두 동구국가보다는 남미국가들과 유사하다는 점이 문명권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여기서

<표 1> 국가별 국민정체성 분포

문명권		국내산업 보호 (%)	국민우선 고용 (%)	전쟁참여 (%)	1인당 국민소득 (\$)
아시아					
한국	(Kor)	59.7	93.4	82.3	13,590
일본	(Jap)	30.0	73.4	31.8	24,070
중국	(Chn)	72.4	81.7	92.0	3,130
대만	(Twn)	51.8	93.2	82.3	15,000 ¹⁾
필리핀	(Phi)	71.3	84.5	86.4	3,520
인도	(Ind)	70.9	86.4	87.8	1,670
터키	(Tur)	83.5	82.9	96.3	6,350
서구					
미국	(Usa)	70.3	62.5	76.4	29,010
독일	(Ger)	41.6	46.2	49.0	21,260
스위스	(Swi)	55.5	67.1	66.8	25,340
스페인	(Spa)	70.4	78.2	58.5	15,930
오스트레일리아	(Aus)	75.0	46.7	73.4	20,210
노르웨이	(Nor)	49.7	42.8	87.5	24,450
스웨덴	(Swe)	56.3	25.6	89.4	19,790
핀란드	(Fin)	58.1	76.1	81.9	20,150
동구					
러시아	(Rus)	65.0	76.7	79.6	4,370
폴란드	(Pol)	71.3	91.8	80.8	6,520
리투아니아	(Lit)	67.3	93.8	64.3	4,220
라트비아	(Lat)	50.0	48.7	64.3	3,940
에스토니아	(Est)	52.6	52.5	71.5	5,240
벨로루시	(Bel)	41.6	78.0	82.6	4,850
우크라이나	(Ukr)	40.6	68.9	75.3	2,190
그루지아	(Grg)	43.2	85.1	72.5	1,960
아르메니아	(Arm)	48.6	70.0	75.8	2,360
아제르바이잔	(Aze)	44.0	86.9	94.5	1,550
남미					
멕시코	(Mex)	81.3	84.4	67.8	8,370
아르헨티나	(Arg)	84.3	80.6	64.1	10,300
브라질	(Brz)	87.1	93.5	70.7	6,480
칠레	(Chi)	76.2	81.9	73.7	12,730
페루	(Pru)	80.4	88.2	88.2	4,680
베네수엘라	(Ven)	85.1	88.8	82.7	8,860
우루과이	(Urg)	91.1	90.8	55.9	9,200
전체 평균		63.3	75.0	75.2	10,665
표준편차		16.4	17.6	13.9	8,300

자료: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으로 환산한 것임. UNDP, *Human Development Indicators*(UNDP, 1997).

1) 대만의 경우 www.nationbynation.com/Taiwan/GNP에서 1999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NP가 \$16,500임을 고려했다

헌팅턴, 잉글하트의 논의가 부분적으로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그러나 지나치게 문명권을 단순화하면 문명권 내부의 편차를 간과할 수 있다. 예들 들어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내에서도 북구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독특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국민우선고용과 같은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수를 나타내는 반면, 국내산업보호와 같은 다른 측면에서는 서로 상이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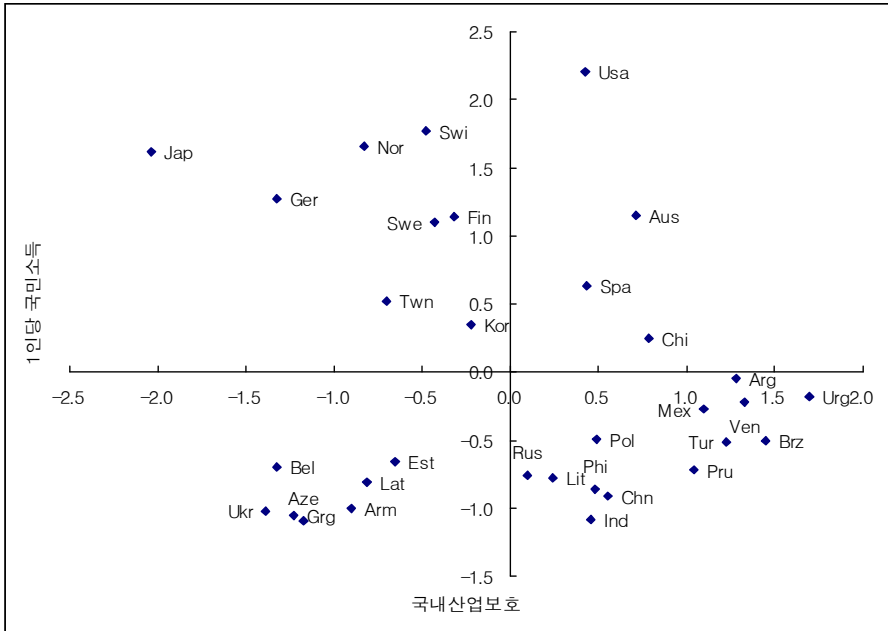
이어서 경제발전수준이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정체성의 범주로 간주했던 세 측면과 1인당 국민소득을 XY 축으로 하고 표준화한 평면에 국가별 위치를 제시했다.

<그림 1>을 보면, 국민소득이 유사해도 남미국가들은 국내산업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동구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에 시장개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자본주의체제에 속하면서 종속이론의 배경이 되었던 남미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동구가 대칭적 양상을 보이는 것을 문화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적 요인을 중시하면 가치관의 변동이 매우 느리게 이루어짐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종교와 같은 오랜 전통과 더불어 자본주의 세계체제나 냉전체제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이 높은 서구국가들이 양극적 의견을 보이기보다 비교적 중간 정도의 입장을 유사하게 취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서구의 경우 경제발전의 정도와 국내산업보호와는 관계가 적다. 만일 서구, 동구, 남미를 모두 서양문명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미와 동구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이룰 경우 두 지역의 국내산업보호에 대한 의견은 서구국가와 유사하게 가운데로 수렴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이다. 그러나 터키를 제외하면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 한국, 필리핀, 중국, 인도가 좌상에서 우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한다.¹⁸⁾ 이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외국상품에 시장을 개방해도 좋다는 의견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대외경제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아시아 국가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다.

18) 터키는 아시아에 속하기는 해도 서구문명에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문화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으로 여타 국가와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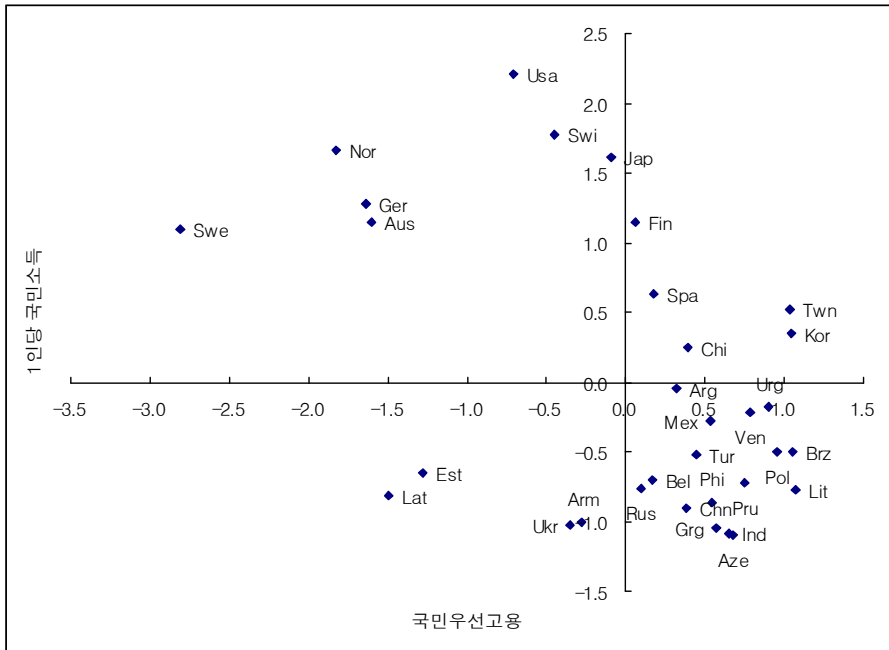
<그림 1>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국내산업보호

<그림 2>는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우선고용에 대한 찬성의견을 같은 방식으로 도표화한 것이다. 대체로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들은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거나 유보를 표명하는 비율이 높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하층 직업을 자국민보다는 타국 출신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저소득국가의 경우 타국민과 노동 및 직업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정도는 경제발전이나 국민소득수준과 관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에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친 것과 달리, 사회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에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예외로 하면, 대만, 한국, 필리핀, 인도, 중국, 터키 모두 국민우선고용을 찬성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비록 작은 차이는

지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이나 대만이 소득수준이 낮은 아시아국가들보다 외국인에 대해 더 폐쇄적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져도 사회적 개방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2>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우선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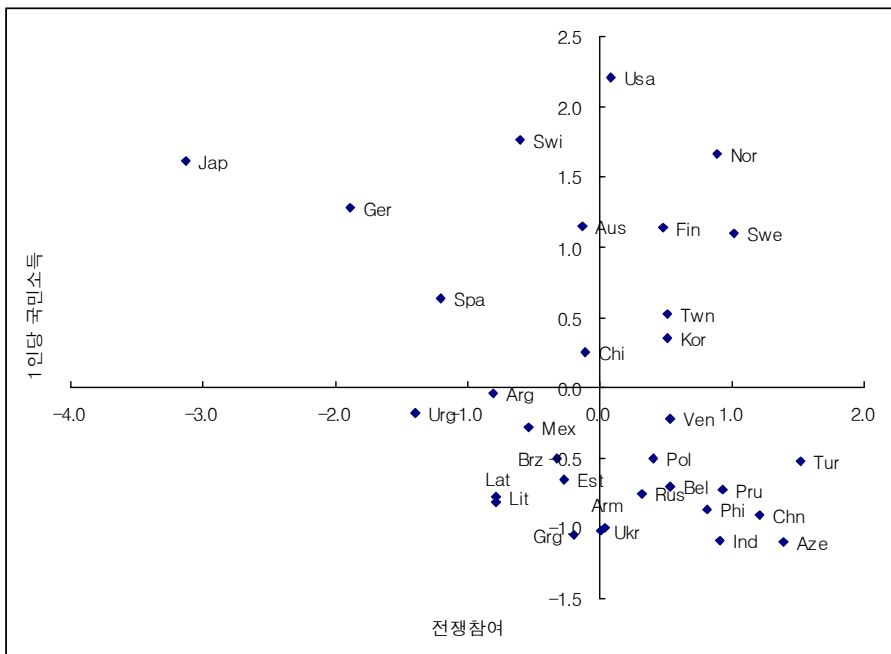
아시아 국가와 반대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부 동구국가들이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등은 일부 아시아 국가는 물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국가들보다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역시 사회적 국민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문화적 요인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그림 3>은 1인당 국민소득과 전쟁참여 의향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앞의 두 그림과 달리 전쟁참여 의향에 대한 의견은 경제발전 수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 군사적 국민정체성은 해당 국가의 전쟁경험 및 주변국가와 군사적 긴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 독일이다. 두 나라는 2

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아직 전쟁 참여를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남아 있다.

두 국가를 제외하면 인접국 국민들 간에 비슷한 수준의 전쟁참여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 아시아에서 한국, 대만, 중국 국민들의 전쟁참여 의향이 유사하며, 광의의 인접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미국 역시 유사한 전쟁참여 의향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리적 인접국은 아니지만 냉전시대 대립국가였던 미국과 러시아가 경제발전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전쟁참여 의향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도 흥미롭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남미의 주요 국가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가 유사한 전쟁참여 의향을 보이며, 동구의 인접국가인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아, 벨로루시와 러시아도 유사한 전쟁참여 의사를 보인다. 한편 북구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도 유사한 전쟁참여 의향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러시아와 인접했다는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3> 1인당국민소득과 전쟁참여

IV. 주변국 국민정체성 분석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 6개국은 <표 2>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각국은 문화적 측면, 경제발전수준, 사회주의체제의 경험 여부 등에서 서로 다르다. 여기서 문명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오래된 전통이라면 경제발전과 사회주의체제 경험 등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좀더 최근의 역사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표 2> 한국 및 주변국의 특성

국가	대문명권	문명권	경제발전수준	사회체제	국민구성
한국	유교	한국문명권1)	중간	자본주의	단순
일본	유교	일본문명권	높음	자본주의	단순
대만	유교	중화문명권	중간	자본주의	단순
중국	유교	중화문명권	낮음	사회주의	복잡
미국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문명권	높음	자본주의	복잡
러시아	기독교	그리스정교 문명권	낮음	구사회주의	복잡

1) 통상 한국은 독자적인 문명권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구분했다

개인수준에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등이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분석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표본의 대표성 정도를 평가해보도록 한다(< 표 3>).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러시아를 제외하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다. 러시아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남성 기대수명과 여성 기대수명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이 많은 것이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¹⁹⁾

연령별 분포를 보면 한국, 중국, 대만 순으로 20대, 30대의 젊은 층이 많은 반면,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은 50대, 60대가 많다. 그러나 이 역시 해당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6.8%), 중국(6.7%)이 낮은 반면, 미국(16.7%), 일본(12.3%), 러시아(12.3%)는 높다.²⁰⁾

19) 1999년의 경우 남성 기대수명과 여성 기대수명의 차이(여성-남성)는 한국(7.5년), 일본(6.8년), 미국(5.8년), 중국(4.2년)인 반면, 러시아는 12.4년이다.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2001), pp. 210~211.

<표 3> 6개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러시아
성						
남자	49.0	49.1	48.6	53.0	50.2	42.9
여자	51.0	50.9	51.4	47.0	49.8	57.1
(명)	(1,224)	(962)	(1,398)	(1,395)	(1,232)	(1,788)
연령						
20대	31.8	15.9	19.2	26.4	16.5	18.0
30대	26.4	20.1	34.7	30.5	27.8	24.7
40대	21.7	30.0	26.1	23.7	23.4	22.8
50대	14.7	19.3	11.0	11.5	14.4	17.5
60대	5.4	14.7	9.0	8.0	17.9	17.1
(명)	(1,224)	(962)	(1,398)	(1,395)	(1,232)	(1,788)
교육수준						
하	23.0	20.2	23.9	39.5	10.7	12.0
중	39.5	46.0	36.3	31.3	45.8	64.9
상	37.4	33.8	39.8	29.2	43.4	23.0
(명)	(1,224)	(952)	(1,097)	(1,392)	(1,229)	(1,788)
소득계층						
하층	31.4	33.2	31.9	23.4	20.9	31.1
중간층	45.9	43.8	42.8	58.4	48.4	47.8
상층	22.7	22.9	25.2	18.3	30.7	22.1
(명)	(1,208)	(785)	(1,244)	(1,395)	(1,124)	(1,692)
주관적계층의식						
하층	19.6	31.7	34.5	39.6	38.8	58.7
중의 하	50.1	52.6	29.1	36.5	27.5	24.1
중상/상층	30.3	15.8	36.4	24.0	33.7	17.2
(명)	(1,222)	(919)	(684)	(1,336)	(1,190)	(1,700)

한편 교육수준은 상대적 수준으로 측정했다. 기본 질문지는 무학부터 대학졸 이상까지 9단계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나라마다 운영되는 교육제도에 따라 상이하게 조사되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²¹⁾ 이에 전문대학 등을 포함해 대학 이상은

20) *ibid.*, pp. 154 ~155.

21)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미만에서 4년제 대학 이상까지 6범주로 측정되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은

하나로 묶고(상), 중학교 이하를 하나로 묶은 다음 하), 나머지를 모두 중간으로 간주했다(중). 그런데 일본의 경우 교육수준이 직접 측정되지 않아 문제였다. 그렇지만 많은 가치관조사에서 교육수준이 가치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교육수준을 대치하는 변수를 모색하게 되었다. 마침 “교육을 마친 연령”이라는 변수가 있어 이를 활용했다. 일본인으로 17세 이하에 교육을 마쳤으면 ‘하’로, 20세 이상에서 교육을 마쳤으면 ‘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중’을 부여했다²²⁾ 결과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경우 교육수준 분포가 유사하게 되었고, 미국은 교육수준이 높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러시아는 중간수준 교육을 받은 층이 많았으며, 중국은 교육수준이 낮은 층이 비교적 많았다. 1·2·3차 교육 등록지수가 미국 95, 한국 90, 일본 82, 러시아 78, 중국 73 인 것을 고려하면²³⁾ 국가별 교육수준 분포 역시 비교적 타당성이 높게 조사되었다고 판단된다.

소득계층은 한국은 9단계, 기타국가는 10단계로 측정되었다. 이 역시 절대적인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단계인 5-6 단계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분포를 고려해 상층, 중간층, 하층을 30%, 40%, 30% 정도에 가깝도록 구분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소득수준에 대한 응답이 5단계(27.0%)에 집중되어 있고, 4단계가 15.5%, 6단계가 15.8% 이어서 이를 모두 중간층에 넣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중간층 비중이 크다.²⁴⁾

주관적 계층의식은 원래 5단계로 구분되었는데, 상층과 중상층을 묶고 하의 상층과 하층을 묶어 3단계로 구분했다. 한편 일부 국가는 중의 하층 대신 노동계급(working class)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역시 하층에 포함시켰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한국, 일본에서 ‘중의 하’라는 비율이 높았고, 러시아에서 하층 비율이 높았으며, 대만, 미국, 한국에서 중상/상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수, 『동서양 탈물질적 가치관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책연구과제, 1999), 7~8쪽 참조.

22) 한국의 경우 1995-1997년에 초등학교 등록율이 93%, 중·고등학교 등록율이 97% 이다(UNDP, *op.cit.* [2001], p. 174). 일본의 경우 이에 대한 통계가 없지만,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정도의 등록율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은 수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23) *ibid.*, pp. 141~142.

24) 한편, 미국은 9단계에 속한다는 응답이 18.2%로 가장 많았다. 이에 9-10 단계를 상층으로 1-4 단계를 하층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펴본 다섯 변수가 국가내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분류분석(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MCA)을 시도했다.²⁵⁾ 먼저 <표 4>에서 국가별로 국내산업보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의견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주변국들 가운데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은 중국, 미국이 높고 이어서 러시아, 대만, 한국이다. 일본은 매우 낮다. 개별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문명권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외국상품 개방에 대해 관대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이 낮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정체성이 낮다기보다 국내상품이 외국상품에 대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산업보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두 요인이 모두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이 낮아지고 있으며(<그림 1>),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내산업보호에 대한 찬성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표 4>). 국가수준의 경제발전 수준은 물론 개인수준의 교육 및 소득수준 역시 국내산업보호에 대한 의견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일본은 국내산업보호에 대한 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여기서 기독교문명과 구분되는 유교문명권의 특성을 감지할 수 있다.

한편, 하위집단별 변화유형은 한국과 일본이 매우 유사하며, 미국과 러시아도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인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은 낮을수록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진다. 반대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이 줄어든다.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의 경우 경제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교육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러시아는 연령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주의체제 경험에 따른 특성을 부분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5) 국민정체성의 하위분야별로 찬성은 100점, 반대는 0점, 모르겠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50점으로 처리했다.

<표 4> 국내산업보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의견 (MCA 분석)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러시아
총평균	59.7	27.7	60.8	72.4	70.6	65.6
	통제후 ¹⁾ (β)	통제후(β)	통제후(β)	통제후(β)	통제후(β)	통제후(β)
성	*** ²⁾	***		*	*	
남자	55.3	22.2	58.3	73.9	68.0	63.6
여자	64.1	33.4	62.9	70.7	73.2	67.2
	(.10)	(.13)	(.05)	(.04)	(.06)	(.04)
연령	***	***		**	*	***
20대	56.3	22.4	57.8	65.3	63.7	52.1
30대	54.3	19.0	60.3	73.4	70.3	61.1
40대	61.2	26.4	58.6	74.3	71.2	66.5
50대	69.0	31.0	70.8	78.7	75.1	73.0
60대	75.0	41.9	59.0	77.4	73.0	77.4
	(.13)	(.17)	(.08)	(.11)	(.08)	(.18)
교육수준	***	***		*	***	***
하	67.7	41.5	72.1	69.4	78.4	67.4
중	64.8	26.6	62.2	76.9	78.7	67.2
상	49.3	21.2	55.9	71.6	60.4	60.2
	(.17)	(.18)	(.11)	(.08)	(.20)	(.06)
소득계층	*	*			*	**
하층	61.0	33.3	67.0	77.5	70.5	69.0
중간층	62.3	27.2	58.4	72.0	73.4	66.3
상층	52.7	20.8	51.1	67.3	66.2	59.2
	(.08)	(.11)	(.12)	(.08)	(.07)	(.08)
주관적계층의식						**
하층	56.9	25.8	61.1	70.1	73.2	69.6
중의 하	58.5	28.1	64.8	72.4	67.6	60.4
중상/상층	63.6	30.1	54.8	76.3	70.0	59.7
	(.06)	(.04)	(.08)	(.06)	(.05)	(.10)
multiple R	.291	.354	.228	.156	.268	.286
R ²	.085	.125	.052	.024	.072	.082

1)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의 예측평균임

2) p *** p<0.001; ** p<0.01; * p<0.05

그러나 대만과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소 다른 유형을 보인다. 이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국내산업보호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교육수준에 따른 일관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경제발전수준이나 사회경제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중국의 문화적 유사성이 경제적 측면의 국민정체성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제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경제발전수준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5>에서 국가별로 국민우선고용에 대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민자로 형성된 국가이며 대표적인 다민족국가인 미국이 외국인에 가장 포용적인 국가로 나타나서 인종 및 민족구성의 다양성이 사회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헌팅턴이나 잉글하트는 국가 내지 문명권을 분석단위로 간주하고 국가구성원 내부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구성원이 다양할 수록 사회적 국민정체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한편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일본과 미국이 국민우선고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발전수준이 사회적 국민정체성에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본 및 미국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낮아지고 있다.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는 교육변수가 사회적 국민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⁶⁾

그리고 한국, 대만, 중국을 비교하면 대만과 중국보다 대만과 한국이 유사하다. 국민우선고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교육수준별로 국민우선고용에 대한 의견차이가 통계적으로 나지 않는다는 점도 일치한다. 한국과 대만은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국민구성이 비교적 단순하며 국력이 약하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성이 있다. 경제발전수준, 국민구성원의 동질성 여부, 개별 국가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 등이 사회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6) 국민소득이 높고 안정된 사회에는, 평상시에 외국인노동자가 많고 그 결과 외국인고용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정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 5> 국민우선고용에 대한 하위집단별 의견 (MCA 분석)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러시아
총평균	93.4	73.8	94.5	82.0	61.9	77.0
	통제후 ¹⁾ (β)	통제후(β)	통제후(β)	통제후(β)	통제후(β)	통제후(β)
성				**		*
남자	93.9	75.2	93.4	79.2	63.7	79.1
여자	93.0 (.02)	72.4 (.04)	95.4 (.05)	85.1 (.09)	60.1 (.04)	75.4 (.05)
연령	* ²⁾	**		***	**	**
20대	91.4	66.8	89.5	74.8	57.7	75.6
30대	93.4	70.5	94.5	83.2	58.7	74.8
40대	94.3	73.2	95.5	82.9	62.9	77.7
50대	95.9	78.5	92.1	88.4	61.6	74.1
60대	95.9 (.08)	79.3 (.13)	96.5 (.09)	88.1 (.14)	69.9 (.09)	83.4 (.08)
교육수준		*			***	
하	95.4	78.7	91.9	82.8	69.4	81.2
중	93.0	75.5	96.3	85.9	66.4	76.2
상	92.7 (.05)	68.9 (.12)	93.0 (.09)	83.3 (.05)	55.7 (.12)	76.7 (.04)
소득계층	***			*		
하층	91.9	72.1	93.8	81.8	65.8	75.2
중간층	95.6	73.0	94.8	80.2	62.3	77.7
상층	91.3 (.10)	77.7 (.07)	95.2 (.03)	87.5 (.08)	58.6 (.06)	77.7 (.03)
주관적계층의식				**		
하층	93.9	72.7	94.3	79.5	63.0	77.9
중의 하	93.5	74.6	93.8	86.4	60.8	76.0
중상/상층	93.2 (.02)	73.7 (.03)	95.8 (.04)	79.1 (.10)	61.6 (.02)	74.9 (.03)
multiple R	.143	.203	.144	.201	.195	.125
R ²	.020	.041	.021	.041	.038	.016

1)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의 예측평균임.

2) p *** p<0.001; ** p<0.01; * p<0.05

마지막으로 <표 6>에서 전쟁참여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중국이 가장 높다 반대로 일본은 전쟁참여에 대한 의향이 매우 낮다. 그리고 한국, 대만, 러시아, 미국은 비슷한 정도의 전쟁참여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 주변이 오랫동안 국제적 갈등이 집중된 지역이었지만, 특히 중국은 20세기 들어 주변국 모두와 전쟁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전쟁에 버금가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편 일본의 전쟁참여 의향이 낮은 것은 2차대전 종전 이후의 평화헌법이나 여전히 ‘군대로서의 자격이 불확실한 자위대의 성격 등 일본 특유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전쟁참여 의향은 경제발전 수준보다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²⁷⁾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은 여성보다 남성의 전쟁참여 의향이 높다. 이는 여전히 ‘전쟁=남성’이라는 관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 내에도 편차는 존재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성별 격차가 크다. 일본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차는 11.1%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전쟁참여 의향이 낮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 한국, 미국보다 성별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만과 러시아는 남녀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는데, 여기에 중국을 포함하면 중화문화적 특성과 사회주의문화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중화문화권의 문화적 특성은 연령별 차이에도 나타난다.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대체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전쟁참여 의향이 낮아지는 데 반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연령별 차이가 없고, 대만의 경우는 오히려 젊은 층에서 전쟁참여 의향이 높다.

교육변수 및 소득계층변수의 효과도 주목된다. 교육변수는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에는 일관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지만, 정치/군사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에는 국민내부적으로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쟁참여 의향이 매우 높은 중국을 제외하면, 소득계층에 따라서 전쟁참여 의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정치/군사적 국민정체성이 교육수준이나 경제발전 수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27) 인접국 사이에 전쟁참여 의향이 비슷함은 <그림 3>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표 6> 전쟁참여에 대한 하위집단별 의견 (MCA 분석)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러시아
총평균	82.5	32.5	82.5	92.2	77.0	79.6
	통제후 ¹⁾ (β)	통제후(β)	통제후(β)	통제후(β)	통제후(β)	통제후(β)
성	*** ²⁾	***	**		***	***
남자	91.2	37.9	87.3	93.2	87.2	86.7
여자	74.2 (.23)	26.8 (.14)	78.3 (.13)	91.1 (.04)	66.5 (.27)	74.2 (.17)
연령	***	***	*			***
20대	77.2	22.8	81.9	93.3	74.0	78.5
30대	85.4	24.8	87.3	91.0	77.2	84.2
40대	87.2	34.4	82.9	93.7	73.7	81.5
50대	85.3	38.3	76.1	91.3	82.2	80.0
60대	72.8 (.13)	39.4 (.16)	74.9 (.13)	90.7 (.05)	80.0 (.08)	70.9 (.12)
교육수준						
하	79.6	33.8	70.2	90.5	73.6	74.0
중	84.5	33.0	84.0	93.3	77.5	80.6
상	82.2 (.17)	29.0 (.04)	84.1 (.13)	93.4 (.06)	77.2 (.03)	79.5 (.06)
소득계층				*		
하층	82.2	33.3	82.8	89.4	76.4	78.2
중간층	83.5	31.3	84.0	92.9	77.7	80.9
상층	81.1 (.08)	34.3 (.03)	76.9 (.07)	93.9 (.07)	76.3 (.02)	78.5 (.04)
주관적계층의식						
하층	79.8	30.8	82.1	91.2	78.5	79.4
중의 하	83.1	33.4	85.7	92.5	74.1	79.5
중상/상층	83.4 (.06)	33.0 (.03)	78.7 (.08)	93.5 (.04)	77.7 (.05)	80.3 (.01)
multiple R	.264	.240	.267	.124	.282	.247
R ²	.070	.057	.071	.015	.079	.061

1)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의 예측평균임.

2) p *** p<0.001; ** p<0.01; * p<0.05

V. 맺음말

세계화시대 국민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시장의 세계화에 대한 반응은 무덤덤하다. 이들은 시장의 세계화를 주도하기는 하지만, 스스로는 시장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크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세계화에 대한 주된 반응은 서구보다 동구과 남미, 그리고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동구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시장 세계화를 받아들이는 데 반해, 남미에서는 전반적으로 세계화에 반발하고 있고, 아시아의 경우는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경제가 발전된 지역에서는 세계화를 수용하는 한편, 경제발전의 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아시아의 발전된 국가의 경우 시장의 세계화는 수용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측면의 국민정체성은 강하게 남아 있다. 세계화시대에도 서구와 구분되는 아시아 국가 및 민족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는 문화적 특성이 유사할지라도,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국민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 사이에는 잠재적인 영토분쟁의 가능성이나 오래된 숙적관계 등이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한국이 포함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다.²⁸⁾ 동아시아 지역은 각 국가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강한 국민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세계화가 추진되더라도 당분간은 유교문화권 공동의 행위보다 국가 또는 민족을 단위로 한 개별적인 행태가 여전히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은기수, 「동서양 탈물질적 가치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책연구과제 99-9-5-2, 1999.

Buzan Barry, Ole Woeb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 1988.

28) 일본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예외적인 국민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로 나왔다. 일본의 독특성에 대해서는 잉글하르트도 지적한 바 있다. Ronald Inglehart, 앞의 논문

Geuibernau, Montserrat, *Nationalisms: the Nation-State and Nation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Polity Press, 1996.

Giddens, Anthony,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권기돈 역, 서울: 새물결, 1997.

Huntington, Samuel,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서울: 김영사, 1997.

Jenkins, Richard, *Social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Inglehart Ronald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2000), pp. 19 ~51.

_____, 「문화와 민주주의」, Samuel Huntington and Lawrence Harrison(eds.), 『문화가 중요하다』, 이종인 역, 서울: 김영사, 2001, 147~169쪽.

Kennedy, Paul, 『21세기 준비』, 변도은·이일수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Smith, Anthony D.,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이재석 역, 서울: 남지, 1997.

UNDP,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 UNDP, 1997.

_____,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 UNDP, 2001.

주요어

세계화, 국민정체성, 세계가치관조사, 문명충돌 가설, 문명지도 가설